

… 유럽통합의 실험을 통해 유럽인이 얻은 것은 평화, 상생, 공동의 번영이다. 이 세 가지는 한반도에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다…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 **04**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





책을 내면서...

지난 '72년 개원 이래 국민통일교육센타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통일교육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통일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균형있는 대북관과 건전한 통일관, 확고한 안보관 형성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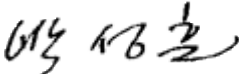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2003년부터는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주제가 있는 통일문제 강좌'를 기획물로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로 발간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유럽연합의 교훈'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이 서로의 통일방안에 대해 공통점을 인정한 점에 주목하고, 공존공영하며 교류협력을 이루어 나가는 「남북연합」의 모습을 유럽의 통합과정을 통해 조망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경험한 유럽 지역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탄생한 유럽통합의 역사와 운용실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과정에 적지 않은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작은 책자에 불과하지만 이 곳에 실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한반도 통합의 과정을 모색해 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3월

통일교육원장 



1. 글을 시작하며

◆ 통일국가의 모습

〈 깊이 보기 ①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유럽의 통합 : 평화체제 구축과 유럽연합의 탄생

◆ 유럽연합의 형성

3. 유럽연합의 체계 : EU기구와 역할

◎ 유럽연합이사회

◎ 유럽의회

〈 깊이 보기 ② 〉 의사결정권의 민주적 배분

◎ 유럽집행위원회

◎ 유럽사법재판소

4. 유럽연합의 현재와 미래

◆ 유럽연합의 현재

〈 깊이 보기 ③ 〉 유럽 내 평화정책과 유럽안보협력기구

〈 깊이 보기 ④ 〉 유럽연합 내 균등발전 정책

◆ 유럽연합의 미래

5.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 평화정착 노력

◎ 상호의존성 제고

◎ 협력적 안보체제 구축

◎ 포괄적 지역공동체의 강화와 신뢰구축

〈 깊이 보기 ⑤ 〉 유럽연합과 독일통일

◎ 민주적 절차 견지

◎ 균등발전 지향

◎ 제도의 통일보다는 조화의 추구

◎ 점진적 단계적 통합

◎ 장기적 안목과 계획

◎ 더 큰 공동체를 향한 열린 아이덴티티(Identity) 형성

20

〈표 1〉 유럽연합의 형성과정

26

〈사진 1〉 유럽연합 의회 건물

30

〈표 2〉 유럽연합 기구와 역할

35

〈사진 2〉 유럽연합 시민의 여권

37

〈그림 1〉 유럽연합이 포괄하는 영역

55

참고 문헌 / 웹 사이트

1. 글을 시작하며



1 [글을 시작하며]

◆ 통일국가의 모습

우리는 모두 ‘우리의 소원’을 부를 때 가슴이 뭉클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정작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룰 수 있고,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가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통일을 생각하면 막연하고, 때로는 불안해지기도 한다.

이런 사회를 한번 가정해 보자.

“남과 북 사이의 군사분계선이 사라져, 사람들은 남북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나 원하는 곳으로 여행과 이사를 하고, 학교에 다니며 직장

을 구할 수 있다. 같은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에 북으로 가기 위해 구태여 돈을 바꿀 필요도 없다. 남한사람이 북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고, 북한사람이 남에 와서 일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과정은 개인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어떤 법적·행정적 제약도 없다. 한편 남북 간의 전쟁위험이 완전히 사라져 두 사회 모두 상대방을 견제하기 위해 지불했던 막대한 국방비를 다른 생산적인 활동에 쓸 수 있다. 또한 공공의 질서를 크게 해치지 않는 한, 특정 이데올로기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사상과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사회는 ‘우리의 소원’을 부르며 떠올렸던 통일된 사회의 모습과 비슷한가?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정녕 요원한 일인가?

이런 사회의 건설은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통일되지 않고서도 가능할지 모른다. 남과 북이 각각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상호의존하는(inter-dependent) 공동체를 만든다면 위와 같은 일은 실현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1989년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과도적 방안으로 남북 연합을 제안한 반면, 북한은 1960년대부터 계속 연방제통일안을 주장해 왔다. 이와 같이 상이한 통일관을 반영한 남과 북의 통일방안은 그 동안 긴장속에서 평행선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6·15 공동선언에서는 남과 북의 통일방안, 즉 “남측의 ‘연합제안’ 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 간에는 공통점이 있으며, 앞으로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한다”고 천명하였다.

남북 정상이 인정한 두 가지 통일방안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까운 장래에 달성하기 어려운 통일보다는 남북 체제공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즉 통일의 모습이 아니라 통일과 통합을 준비해 나가는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둘째, 두 방안이 모두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당장 통일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이 체제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평화롭게 공조하는 과도적 단계와 느슨한 결합을 예정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연합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9. 9)에서 제시한 ‘남북연합’ 과 동일한 것이다.

깊이 보기 ①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8년 2월 25일 출범한 제6공화국 정부는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한 통일노력을 전개하였다. 그러한 노력은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 선언)과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의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다.

- 7·7 선언은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 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통일조국

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간의 대결구조를 화해구조로 전환시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정책선언이었다. 즉 7·7 선언은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협력의 기본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이 때부터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선언에 따른 대표적 조치 중의 하나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의 공포·시행이었다.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되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7·7 선언을 계승한 것이며 남북간에 누적된 불신과 대결의식, 이질화 현상을 그대로 둔 채 일시에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통일을 이룩하려면 먼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

우선 통일의 원칙으로 ‘자유·평화·민주’를 제시하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하였다. 통일국가의 수립절차는 남북대화의 추진으로 신뢰를 회복해 가는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하고, 남북의 공존공영과 민족사회의 동질화, 민족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을 거쳐,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인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민족공동체헌장 합의 내용에 따라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공동사무처 등을 둔다는 것이다.

남북연합(The Korean Commonwealth)은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으로 남과 북이 상호 협력과 공존공영의 관계를 도모하면서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도적 통일체제임을 뜻한다.

이렇게 볼 때, 남북연합은 기능적 측면에서 여러 국가가 하나의 생활공간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유럽공동체'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책자에서는 유럽공동체 즉, 유럽연합의 형성 배경·과정 및 운영 실태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유럽의 통합 : 평화체제 구축과 유럽연합의 탄생



2

유럽의 통합

: 평화체제 구축과 유럽연합의 탄생

◆ 유럽연합의 형성

전통적으로 유럽은 수많은 전쟁과 분쟁으로 점철된 세계의 화약고였다. 수세기 동안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국가들은 이편 저편 갈라가며 끊임없이 싸웠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대표적인 분쟁지역으로 187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세 번이나 대규모 전쟁을 하였고, 그 중 두 번은 세계대전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20세기 최대의 재앙으로 전세계적으로 5천만 명이 생명을 잃고, 수십 개의 주요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유럽에서만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이런 엄청난 피해로부터 유럽인들이 깨달은 것은 전쟁을 멈추고, 피폐해진 유럽을 재건할 지역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유럽연합의 맹아는 평화정책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싹트기 시작했다.

1951년에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가 탄생하였다. 프랑스, 독일(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유럽 6개 국은 당시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던 석탄과 철강을 국가단위를 넘어서 공동관리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이 시도는 성공하였고 1957년에는 협력의 대상과 규모를 넓혀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uratom)를 탄생시켰다.

유럽경제공동체의 기본 원리는 회원국들 간에 관세를 폐지하여 “단일시장”을 만드는 것이었다. 유럽원자력공동체는 전세계를 초토화할 수 있는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동기구이다. 이 기구를 탄생시킨 로마조약에는 이러한 연대가 유럽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번영을 이룰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였고, 한편으로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 저개발지역이 더 이상 낙후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밝혔다.

이러한 연대의 노력은 더욱 발전하여, 1967년에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와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원자력공동체를 통합하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가 창설되었다. 아울러, 유럽공동체

를 운영하는 독자적인 기구도 만들어졌는데, 회원국 정부들의 대표로 구성된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 초국가적 집행기구인 위원회(Commission), 그리고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그것이다. 이 세 기구는 그 후 권한과 역할이 확대 발전되면서 현재까지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유럽공동체는 1973년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 1981년 그리스, 1986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받아들여 양적 확대를 이루었다.

한편 질적으로도 발전하여, 내부의 경제통합을 견고히 할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특정한 국제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1975년에 유럽공동체가 아프리카, 태평양, 중남미의 46개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합의한 것은 유럽이 국가단위를 넘어서 공동의 외교정책을 펼치는 출발점이었다.

유럽공동체는 그후 계속 유기체처럼 성장하였다. 1979년에는 유럽 의회를 유럽인의 직접선거로 구성하였고, 각 국가간 화폐가치를 조정하는 유럽통화체계(European Monetary System: EMS)을 만들었다.

1992년에 유럽공동체는 드디어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으로 탈바꿈하였다. 유럽연합 내에는 관세 뿐만 아니라, 자본, 서비스, 상품, 인력의 자유로운 유통을 막는 모든 장벽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즉 회원국의 국민은 유럽연합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여행하고, 차별 없이 교육받으며,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유럽경제공동체에서부터 시도해 온 “단일시장”의 건설이 완성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관할범위도 확대되어, 회원국은 경제적 영역 뿐만 아니라, 국방·사법 및 내무행정의 문제도 협력하게 되었다.

한편 유럽통화체계는 1999년 유럽통화연합(European Monetary Union: EMU)으로 발전하여 유럽연합 내의 화폐통합을 준비하였다.

2002년 드디어 유럽중앙은행이 관할하는 단일화폐 유로(Euro)를 도입, 당시 회원국 15개 중 12개 국이 자국화폐를 버리고 유로를 사용하게 되었다.

유럽연합 출범 이후 회원국도 크게 증가하여 1995년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가입하였다. 2004년 5월에는 구동구권 국가를 포함한 10개 국이 편입되었다.

현재 유럽연합에는 모두 25개 국이 가입되어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고, 이 국경 없는 공동체에 소속된 유럽시민만도 4억 5천만 명에 이른다.

〈표 1〉 유럽연합의 형성과정

연도(조약)	통합기구	특 징	회원국(가입연도)
1951 (파리조약)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 6개 국 석탄·철강산업 공동관리	프랑스, 독일(서독),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이상 '51)
1957 (로마조약)	유럽경제공동체 (EEC) 유럽원자력공동체 (Euratom)	• 관세동맹, 공동무역정책 등 단일시장형성 추구 • 유럽 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공동개발 추구	•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이상 '73) • 그리스('81) • 스페인, 포르투갈('86)
1967 (통합조약)	유럽공동체(EC)	• 유럽통합의 본격적 추구 - 유럽공동체 운영을 위한 독자기구(유럽의회, 집행위 원회 등) 구성	
1992 (마스트리 히트조약)	유럽연합(EU)	• 유럽연합 출범 ※ 통합의 원칙 - 경제공동체 구현 - 내무·사법분야 협력 - 공동 외교안보정책 추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상 '95)
1997 (암스테르담 조약)		• 유럽통합 본격추진을 위 해 규정·절차 정비 - EU 법적근거 마련 및 통합 관련 절차 규정	
2004 (유럽헌법 조약)		• 본격적인 정치 통합 추진 - EU 대통령직 신설, 공동 외교안보정책수행 등 ※ '05.1.13 유럽의회 승인, 각국의회 비준절차를 거쳐 '07부터 발효 예정	사이프러스, 체코, 몰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슬로베 니아(이상 '04)

3. 유럽연합의 체계 : EU기구와 역할



3 [유럽연합의 체계 : EU기구와 역할]

유럽연합을 이루는 25개 회원국가는 민족·언어·문화·경제발전 정도가 다른 나라들이다. 그러므로 회원국들 간에 특정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고, 유럽연합이 관할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어떤 문제는 내정간섭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다자간 협력체제인 유럽연합이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것, 즉 각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회원국 모두가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럽연합이 지난 50여 년간 서서히 형성된 것처럼, EU기구들도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현재 거대한 유럽연합을 움직이는 주요 기구들은 다음과 같다.

◎ 유럽연합이사회 (The Council of European Union)

이사회는 각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이다. 회원국 각료들로 구성되므로 각료회의(Council of Ministers)라고도 불린다. 유럽연합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사회에서는 주요 사안에 대해 각국의 이해를 조정하여 유럽연합 차원의 결정을 내린다.

이사회 회의는 9개 분과(외교, 경제, 사법 및 내무, 고용 및 사회정책, 시장 및 산업, 교통통신 및 에너지, 농업, 환경, 교육 및 문화)로 구성되며, 각 분과회의에는 회원국의 해당부서 장관이 그 국가의 대표자격으로 참석한다.

한편 이사회회의의 특별정례모임으로 수상 또는 대통령 등 각국의 수반으로 구성되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있다. 유럽이사회는 경우에 따라 회원국의 각료들이 합의하지 못한 사안들을 중재하거나 협상을 촉진하는 일을 한다. 유럽이사회회의의 결정이 법적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대체로 이후 이사회차원의 공식적 결정에 반영된다.

이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포함해 유럽공동체의 주요 활동을 모두 관할한다.

- 유럽연합법과 조약을 체결한다.
- 새로운 회원국가의 가입을 승인한다.
- 공동의 외교·안보정책을 개발한다.
- 회원국 간의 경제정책을 조정한다.
- 실무위원회가 제안한 예산을 확정한다.

안건은 이사회 내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 이견을 조정한 후, 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유럽연합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예컨대 새로운 조약체결이나 회원국가 승인 등)은 만장일치에 의해 결정하지만, 그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가중다수결제(Qualified majority voting)에 의해 결정한다.

이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의사 정족수는 투표수의 약 2/3(2004년 말 현재 321표 중 232표)이다. 각국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수에는 최소 4표에서 최대 29표에 이르며, 각국의 투표수는 대체로 인구비례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의 경제력이나 가입시기와 관계 없이 인구비례로 투표수를 정한 것은 유럽연합이 그 시민의 뜻에 의해 운영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려하기 때문이다. 이사회의 의장은 특정국가가 이사회

를 주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국 수반이 6개 월마다 돌아가며 맡는다.

◎ 유럽의회 (The European Parliament)

유럽의회는 매 5년마다 각 회원국의 인구비례에 의해 유럽연합 시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된다. 2004년 6월에 있었던 유럽의회 의원 선거의 경우, 3억 5천만 명의 유권자가 732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유럽의회 의원은 국적과 자국 내 소속정당과는 상관없이 몇 개의 통합당에 소속되는데, 현재 유럽의회를 이끄는 주요 당은 진보적인 “유럽사회주의당(Party of European Socialists)”과 보수적인 “유럽인민당(European People’s Party)”이다.

유럽의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지닌다.

- 유럽연합법과 조약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 실무위원회와 이사회에 질의할 수 있다.
- 실무위원회가 제안한 예산을 수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 실무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이사회가 결정한 새로운 회원국가를 최종적으로 승인한다.



〈사진 1〉 유럽연합 의회 건물 : 이 건물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나선형 원통모양을 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실험은 계속되며, 그 미래는 유럽시민들이 결정한다는 것을 상징한 것이다. 사진 출전 : Tames, Richard, *The European Union : A young citizen's guide series*, Hodder Wayland, 2002.

깊이 보기 ② : 의사결정권의 민주적 배분

이사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투표수와 유럽의회 의원의 수는 국력이 강한 특정 국가의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체로 인구대비에 의해 결정되나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한 것은 아니다. 룩셈부르크나 사이프러스는 인구 백만 명도 되지 않지만 이사회 결정과정에서 4표를 갖는다. 인구비례로 볼 때 이것은 적지 않은 수이다(룩셈부르크 인구의 200배 가까이 되는 독일은 29개 표를 갖는다). 폴란드는 가입하자마자 이사회 결정에서 27표나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2004년 5월 기준

	이사회 투표수	유럽의회 의원수	인구수(천 명)
독일	29	99	82,000
프랑스	29	78	64,000
영국	29	78	58,600
이탈리아	29	78	57,600
스페인	27	54	39,400
폴란드	27	54	38,600
네델란드	13	27	15,800
포르투갈	12	24	10,800
그리스	12	24	10,500
체코공화국	12	24	10,300
헝가리	12	24	10,200
벨기에	12	24	10,100
스웨덴	10	19	8,900
오스트리아	10	18	8,100
슬로바키아	7	14	5,400
덴마크	7	14	5,300
핀란드	7	14	5,100
아일랜드	7	13	3,700
리투아니아	7	13	3,500
라트비아	4	9	2,400
슬로베니아	4	7	2,000
에스토니아	4	6	1,400
사이프러스	4	6	800
룩셈부르크	4	6	430
계	321	732	454,000

◎ 유럽집행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집행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의 상시적 집행기구이다. 기능상으로 보면 한 국가의 내각과 비슷해 의장이 집행위원회를 이끈다.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된다. 집행위원회 위원은 회원국 국가의 규모와 상관없이 한 국가당 한 명이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철저히 독립적으로 일한다. 집행위원의 임기는 5년이나, 유럽의회가 결정할 경우 집행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현재 브뤼셀에 있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보좌하는 약 3만 명의 실무자들로 구성된다. 이들 중 1/3 가량은 번역과 통역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현재 유럽연합의 공식언어는 20개이므로, 모든 문서를 20개 국어로 번역하고 회의를 통역하는 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 새로운 법과 규정을 제안한다.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승인)
- 예산을 작성한다.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확정)
- 의제를 결정한다. (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논의)
- 유럽연합 차원의 결정이 회원국 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 유럽연합기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한다.
- 유럽연합 차원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내무), 국제기구 등과 협력(외무)한다.

이상 세 기구는 유럽연합을 움직이는 기둥으로, 상호 긴밀히 연결되고 서로 신뢰할 때만 유럽연합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 유럽사법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사법재판소는 유럽연합법과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는 일을 담당한다. 현재 유럽사법재판소는 판결을 회원국에게 강제하여 국내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직접적 권한은 없으나 지금까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회원국가에서 무시된 사례는 없다. 사법재판소는 각국에서 한사람씩 선출된 판사들과 그들을 돕는 법무심의관들로 구성된다.

사법재판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쟁을 조정한다.

- 유럽연합과 회원국간의 분쟁 :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주로 유럽연합법을 따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집행위원회가 기소하는 형식으로 재판이 시작된다.
- 유럽연합 시민의 권리 침해 구제 : 유럽연합 시민은 누구나 유럽연합법을 위반한 기관을 유럽사법재판소에 기소할 수 있다.

- 유럽연합 기구 간의 분쟁
- 국제조약의 법적 측면에 대한 의견제시 등

〈표 2〉 유럽연합 기구와 역할

기구	역할	소재지
유럽연합이사회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의사결정기구	브뤼셀
유럽의회	유럽시민의 직접선거로 구성된 대의기구	브뤼셀
유럽집행위원회	상시적인 업무를 관할하는 독립적인 집행기구	브뤼셀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연합법을 수호하고 분쟁을 조정	룩셈부르크
유럽회계감사원	예산(유럽연합기금) 사용내역을 감사	룩셈부르크
유럽중앙은행	유럽통화정책과 유로(Euro)를 관리	프랑크푸르트
유럽투자은행	재정투자를 통해 유럽연합 내의 균형 발전을 도모	룩셈부르크
유럽경제사회위원회	시민단체의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제시	브뤼셀
지역위원회	지역사회의 의견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제시	브뤼셀
유럽옹보즈맨	유럽시민의 민원창구	스트라스부르크

4. 유럽연합의 현재와 미래



4 [유럽연합의 현재와 미래]

◇ 유럽연합의 현재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1951년에는, 어느 누구도 50년 이후 유럽연합이 이토록 커지리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25개 국이고 인구는 4억 5천만 명에 이른다.

유럽연합을 통해 유럽인들이 얻은 것은 적지 않다. 그 주요 성과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유럽 내 평화정착**: 유럽통합이 유럽인에게 주는 최대의 이점으로는 이제 유럽국가간의 전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

다. 예컨대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 내에서 상호의존하면서 공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 두 국가간의 전쟁은 생각할 수 없다. 자본과 노동력, 상품의 국경이 허물어진 상황에서 평화상태가 깨어지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 유럽통합이라는 역사상 초유의 실험은 이와 같이 지난 50여 년간 꾸준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를 유럽 내에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다.

깊이 보기 ③ : 유럽 내 평화정책과 유럽안보협력기구

유럽연합과 함께 유럽 내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른 한 축은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OSCE)이다.

유럽연합이 각 회원국의 경제·사회 제 분야를 긴밀히 연결시켜 각국이 공동체 내에서 상호의존하도록 한 것이라면, 유럽안보협력기구는 특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협력하여 분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해결방법을 공동모색하는 것이다.

유럽연합과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상호 독립적으로 발전한 제도이지만, 두 제도 모두 유럽 내의 평화정책과 번영이라는 공동의 대의를 추구한다. 현재 유럽연합에 소속된 모든 국가들은 유럽안보협력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이다.

유럽안보협력기구가 만들어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49년에 미국·캐나다·서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1955년에 소련과 대부분의 동구권국가들을 포함하여 건설된 바르샤바조약기구(WTO)는 냉전시대 두 개의 대립적 집단안보체제였다. 1960년대를 거치면서 이념분쟁과 냉전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무력충돌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이러한 불안정한

국제환경이 자국의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자, 각국은 대립적인 집단안보체제를 보완하는 새로운 안보체제의 건설이 필요하게 되었다.

1975년, 그 동안 소련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유럽집단안보조약 체결 제안을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받아들임으로써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출범하게 되었다. 유럽안보협력회의를 탄생시킨 헬싱키 최종의정서에는 안보협력회의가 “회원국들간에 분명하고 시의적절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무력충돌, 군사활동의 오해 혹은 잘못된 계산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주요 임무는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개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분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예방하는 것이었다.

1995년 1월에 유럽안보협력회의는 유럽안보협력기구로 발전하였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현재 유럽과 중앙아시아, 북미국가 55개 국을 포괄하는 최대의 지역 안보기구로, 안보문제와 관련한 조기경보·분쟁방지·위기관리·분쟁 후 복구 등에 협력하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는 안보를 포괄적이고 협조적으로 접근한다. 즉 안보를 군축뿐만 아니라, 예방적 외교에서 인권·민주화·선거감시에 이르는 광범한 정치·사회영역으로 파악한다는 면에서 포괄적이고, 모든 참가국가가 동등한 권리를 지니며 합의에 의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점에서 협조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동북아에 헬싱키 체제와 유사한 공동안보협력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냉전시대 대립적인 안보기구였던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더 큰 협력적 안보기구를 구성하여 유럽 내의 평화 정착의 길을 열었던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각각 맺고 있는 한·미방위동맹과 조·중우호협력 및 호상원조 조약을 포괄하여 동북아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동북아에 협력적 예방적 안보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 : 유럽연합은 상품과 서비스가 자유롭게 유통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다. 유럽연합 내에서 생산자는 거대한 소비시장을,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다.

➔ **유럽 내 균등발전** : 유럽연합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개발비용을 제공하여 유럽연합 내의 균등한 발전을 지향한다.

깊이 보기 ④ : 유럽연합 내 균등발전 정책

유럽연합이 통합공동체로서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발전상태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된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모두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에 100억 유로를, 2005년에 125억 유로를, 2006년에는 150억 유로를 지원한다. 이 지원금은 주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과 국가행정체제의 개선, 농업지원 및 농촌개발 등에 사용될 것이다.

➔ **유럽시민의 자유** : 유럽시민들이 자기 국가를 떠나 마음대로 여행하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사진 2〉 유럽연합 시민의 여권 : 유럽연합 시민의 여권에는 자신이 속한 국가 이름과 유럽연합의 명칭이 동시에 새겨져 있다. 이 여권으로 유럽연합 어느 곳든 마음대로 여행하고, 일하고, 교육받을 수 있다.

→ **공동문제에 효과적 대처** : 공해 · 환경 · 국제범죄 · 마약밀매와 같이 국가간 공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제사회의 발언권 강화** : 유럽연합은 점점 국제문제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그룹이 되어가고 있다. 국제문제에 대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공동대처하는 것이 개별국가로서 대처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영향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 유럽연합의 미래

유럽연합은 앞으로도 더욱 확대되어 2007년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된다. 오래 전부터 가입을 희망하는 터키도 언젠가는 유럽연합에 소속될 가능성이 높다.

옛 소련의 독립국가들(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몰도바 등)도 정치적 상황이 안정되어 유럽연합의 가입조건이 충족되면 가입을 희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옛 유럽의 식민지였던 지중해연안국가들(모로코, 튀니지아)도 가입할 경우 유럽연합은 동쪽으로는 아시아에, 서쪽으로는 아프리카의 경계지역까지 확대된다.



〈그림 1〉 유럽연합이 포괄하는 영역 : 현재 유럽연합 회원국은 25개 국, 유럽시민은 4억 5천만 명에 이른다.

한편, 유럽연합이 점차 질적으로도 발전하면서 단순히 독립국가들의 연합체로서 기능을 넘어 유럽연합 자체가 독자적인 집행력과 권력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과거에는 개별 주권국가의 고유영역(헌법, 군대, 경찰 등)이었던 분야에 대해서도 점차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듯 유럽연합이 확대·발전하되, 얼마만큼 더 확대될지, 어느정도까지 통합될지, 즉 유럽연방국가(United States of Europe)로까지 나아갈 것인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럽연합이 나아갈 바는 전적으로 유럽시민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유럽인들은 유럽연합이 인류 초유의 실험이며, 이 실험은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미 그들은 유럽연합의 건설을 통해 많은 것을 얻었다. 그 중 유럽 내의 평화는 그들이 얻은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것만으로도 유럽 통합의 의의는 충분할 것이다.

5.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현재 유럽연합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실험 즉, 수십 개의 상이한 민족국가들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통합시켜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 통합의 과정은 철저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이러한 공동체의 건설은 과거 로마제국이나 대영제국이 만들려고 하였던, 힘에 의한 제국건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럽연합의 규모를 염두에 둔다면, 남북연합의 건설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로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 유럽연합의 경우와 같이 경제규모가 천차

만별인 25개 국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20개의 서로 다른 공식 언어를 사용해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5억 명의 시민에게 동일한 권리를 주어야 하는 것도, 3억 5천만 명의 유권자를 관리해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남북한은 이미 언어와 문화, 관습을 공유하고 있는 단일문화공동체이다. 단일문화공동체이기 때문에 통합을 위해 지출해야하는 방대한 재정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컨대 남북한공동체의 경우, 유럽집행위원회처럼 수천 명의 통역사와 번역가가 필요 없다.

그런가 하면 남북한의 경우에는, 유럽연합의 정체성과 관련된 쟁점, 즉 어디까지가 유럽인가라는 문제도 제기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남북연합이 유럽연합의 전례를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북연합과 유럽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유럽연합은 체제가 같은 국가간의 통합이라는 점 때문이다.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의 경우 정치체제도 경제체제도 같지 않다. 이러한 점 때문에 남북연합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도 적지 않다.

또한 유럽연합은 주권국가간의 연합이므로 반드시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다. 이 점은 연합단계를 통일국가의 과도적 단계로 상정하고 있는 한반도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유럽연합은 유럽의 맥락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남북연합은 한반도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인 제도의 통합과정은 다를지라도, 유럽연합이라는 역사적 실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적지 않다. 그것은 구체적인 제도의 운영방식이라기보다, 유럽연합을 가능하게 한 통합의 원칙과 철학이며,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평화정책 노력

잠재적인 분쟁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이 번영하기 위해서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것은 평화의 정착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이 배운 교훈은 전쟁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경제통합, 안보협력 등은 유럽의 평화정책에 기여하여 현재 유럽에서 전쟁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유럽 및 서방선진국은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의 ‘소극적’ 평화를 넘어서 인권보장과 환경보존,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적극적’인 평화상태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가장 기본적인 평화 상태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한 신뢰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가장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 상호의존성 제고

분쟁지역에 실질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을 높이는 것이다.

말하자면 상대방을 정복하는 것보다 상대방과 협력하는 것이 더 큰 이익을 주는 국가간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자원의 관리, 상품의 생산, 유통과 소비 등 경제 제영역을 긴밀히 연결시킴으로써 실질적인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경제공동체로부터 출발하여 현재와 같은 공동번영의

초국가적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공동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남북경협, 특히 개성공단의 건설은 이 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시도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시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켜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남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은 제로섬(Zero-sum)원리에 기초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 제로섬이 될 수도 있고, 상생(相生)이 될 수도 있다. 상호의존적 체제는 상생 관계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될 수 있다.

◎ 협력적 안보체제 구축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경제·사회적 통합과 동시에 군사·안보적 신뢰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헬싱키 최종의정서에 의한 유럽 안보협력회의(현재 유럽안보협력기구)와 같이, 대립적인 지역안보 기구를 포괄하는 협력적 공동안보체제를 구축하여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군사안보면에서 남북한 당사자간 상호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

과 동시에 남북한과 주변국을 아우르는 협력적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다.

군사적 신뢰구축은 그 자체로 대단히 중요한 일임과 동시에 효과적인 경제공동체 구성의 초석이 된다. 군사적 긴장상태는 경제영역에서의 상호의존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또한 생산적인 경제활동과 사회복지 영역에 사용되어야 할 자원을 줄여 국방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결과도 초래한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유럽경제통합과 협력적 안보체제 구축 등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민총생산(GDP)의 1.5%정도(국방비지출이 가장 많은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2.8%정도)를 국방비로 사용하는 데 반해 남한은 국민총생산(GDP)의 약 3%를, 북한의 경우에는 무려 15%선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한에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창과 칼을 대신하여 쟁기와 호미”을 만들 수 있게 된다.

◎ 포괄적 지역공동체의 강화와 신뢰구축

우리는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을 통해, 한반도 통일에 있어 주변국과의 신뢰구축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였던 독일의 재통일을 다른 국가들이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서독이 유럽통합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패권적 국가주의의 이미지를 벗고 유럽연합의 공동번영을 위해 힘썼기 때문이다.

만약 분단 당시의 서독이 주변국과의 신뢰구축에 실패했거나, 통일이 국제관계에서의 힘의 균형을 깨뜨리고 통일독일이 패권추구로 나아갈 소지가 있었다면 독일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했거나, 설령 이루어졌다하더라도 유럽 내의 거대한 분쟁의 씨앗을 뿌리는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깊이 보기 ⑤ : 유럽연합과 독일통일

독일은 유럽통합을 주도해 온 국가이자, 유럽통합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독일이 얻은 가장 큰 혜택은 유럽통합의 맥락에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 통일 전 : 1950년 프랑스의 외무장관 로베르 슈망(Rober Schuman)이 서유럽의 석탄철강산업을 통합하자고 제안했을 때, 서독은 이에 적극 동조하여, 지금 유럽연합의 맹아가 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6개 회원국 중 하나가 되었다.

서독의 입장에서 지역연합에 속하게 되는 것이, 독일의 재무장을 극도로 경계하는 이웃국가들로 하여금 의혹을 불식시키고 전범국가라는 과거사의 짐을 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이에 독일의 초대 총리 콘라트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서유럽 통합에 앞장섰고, 특히 프랑스와의 관계개선에 주력하였다.

또한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는 이른바 '동방정책'을 통해 동독과 점진적인

관계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유럽공동체(EC)와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견지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지속적인 정치교육을 통해 독일문제를 유럽전체의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어 나갔다.

➔ 통일 과정 : 서독은 유럽공동체 내에서 주변국과 긴밀히 협력하였기 때문에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 동서독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주변국들은 독일의 통일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이미 지난 40년간 서독은 유럽공동체 내에서 강한 신뢰를 얻었기에 독일 통일에 대한 유럽인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전범국가이었던 독일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거스리지 않고 재통일될 수 있었다. 독일통일이 유럽통합의 질서를 거슬러서 독일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서독이 소속되어 왔던 유럽공동체 속에 동독을 편입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동독지역은 통일과 동시에 유럽공동체에 자동적으로 속하게 되었다. 이것은 동구권 국가 대부분이 사회주의제도 붕괴 후 유럽공동체에 가입하기 위해 10여 년을 기다린 것과 비교해 볼 때 동독이 큰 혜택을 누린 것임을 보여준다.

➔ 통일 후 : 독일이 유럽공동체 속에서 통일을 이룬 후 독일인들이 갖게 된 이득은 많다. 유럽연합이 구동독지역에 대해 저발전지역을 돕는 개발기금을 지원한 것 이외에도, 구동독지역의 전문가·노동자들은 유럽연합국가 어디에서든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구동독인력을 유럽연합 국가들이 흡수함으로써, 구서독이 감당해야 할 사회적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통일 후 독일의 인구는 유럽연합 회원국가 중에 가장 많기 때문에, 현재 독일은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강한 의사결정권을 지니게 되었다. 요컨대 독일은 유럽연합 속에서 통일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주변국과 동반자적 관계를 완성할 수 있었다.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독일통일이 유럽연합이라는 지역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남북한 통일을 동아시아공동체라는 더 큰 공동체의 맥락에서 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 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고, 장기적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소속국과 한·중·일을 아우르는 동아시아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아시아공동체의 건설을 통해 남북한은 세계 최대 단일시장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아시아국가 공동번영의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민주적 절차 견지

25개 국이 망라되어 있는 유럽연합을 유지하는 힘은 의사결정에 철저히 민주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점에서 나온다.

즉 국가간의 이견은 전적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며,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언론들을 개방하여 국가의 미래를 시민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화와 타협, 합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균열될 수밖에 없다. 유럽연합이 의장을 순번제로 선출하고, 인구대비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권을 분배하는 것은 일부 국가의 패권주의를 경계하고 최대의 합의를 이루어내는 민주적 경로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민주적 절차는 남한사회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나, 남북한간 협상의 과정에서, 더 나아가 통일국가의 국가기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이다.

◎ 균등발전 지향

모든 면에서 똑같이 발전한 두 사회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유럽연합이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지역에 대해 연합차원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불균등발전이 궁극적으로 유럽연합의 평화를 해치기 때문이다. 저개발 지역을 지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유럽연합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남북한간의 불균등발전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경제수준의 격차는 이미 20배를 넘고 있으며,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벌어질 전망이다.

북한에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지원하고 북한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남북한간의 경제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은 남북한간의 불균등발전 정도를 완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 제도의 통일보다는 조화의 추구

유럽연합의 회원국가들은 상이한 언어·문화·사회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통합(integration)을 위해 이런 제도들을 하나로 '통일(unification)' 하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또한 유럽인들은 다양성(diversity)을 유럽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통일을 바람직하게 여기지도 않는다. 대신 서로 다른 제도와 관습이 충돌함이 없이 공존하면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간의 호환성을 높이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들은 공동체를 움직이는 힘은 통일(unification)이 아니라 조화(harmonization)에서 나온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경우, 비록 같은 언어와 관습을 지닌 한 민족이라고 하더라도, 지난 60년간 상이한 정치경제 체제 속에서 살아 왔기 때문에 이질화된 영역들이 결코 적지 않다.

조화로운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한 두 사회의 상이한 점 중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을 다양성으로 인정하는 아량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제도들을 무리하게 대체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두 제도가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는 호환체제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점진적·단계적 통합

유럽통합은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경제경역에서의 협력, 특히 자원의 공동관리로부터 시작하여 사회·외교·안보·내무·사법 분야에까지 서서히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질적인 사회가 공존의 기반을 마련할 때, 모든 사회영역을 동시에 통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가능한 일부터 서서히 시작하면, 그렇게 시작된 일이 다음 단계의 통합의 조건을 마련하게 된다.

남북한의 경우 사회문화적 영역, 경제협력기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교류와 협력의 범위를 넓혀 나가면 두 제도간의 공통의 기반이 확대되고, 그렇게 형성된 기반은 나아가 정치와 군사, 외교 분야의 공조를 이루어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 장기적 안목과 계획

유럽연합의 현재가 있기까지는 5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 50여 년 간 유럽통합은 서서히 완만하게 이루어졌다. 급진적이고 전면적인 통일은 늘 균열의 위험성을 내포하기 마련이다.

남북한 통합의 역사는 상대적으로 매우 짧다. 우리는 분단 후 오랜 시간을 경쟁과 반목으로 보냈고 남북한간의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된 역사는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남북통합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 속에서 통합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한, 유럽시민들이 유럽연합의 현재를 보듯이, 우리도 통합된 공동체가 평화롭게 기능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더 큰 공동체를 향한 열린 아이덴티티(Identity) 형성

유럽연합이 단일국가를 넘어서는 초국가적 지역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그 구성원들이 소속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 뿐만 아니라 ‘유럽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힘은 구성원 자신이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과 공동체의 운명을 연관시키게 될 때 창출된다.

구성원의 아이덴티티는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아교가 될 수도,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기름이 될 수도 있다. 남북한 통일에 필요한 것은 남북한을 하나로 아우르는 공동체와 자신의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집단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이다.

한민족임을 강조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더 나아가 통일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민족' 만을 내세우는 좁은 민족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속한 지역과 세계 공동체의 평화와 번영을 동시에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한에 사는 한국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뿐만 아니라, 남과 북을 아우르는 한민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더 나아가 아시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 세계시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공존의 철학을 잃지 않는다면 세계시민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이 결코 한민족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과 상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유럽연합의 창설과정, 체계, 현재와 미래에 대해 살펴보고, 유럽연합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고찰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는 유럽통합의 실험을 통해 유럽인이 얻은 것은 평화, 상생(相生), 공동의 번영이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한반도에도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다. 그들이 이루어낼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유럽연합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차분하고도 조용하게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번영은 우리 국민 모두의 역사적 소명임과 동시에 반드시 이룩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 김병오, 『민족통일과 남북연합』, 여강출판사, 2001.
- 통일교육원, 『남북한 평화공존과 남북연합 추진방안』, 2001.
- 통일교육원, 『통일 · 남북관계사전』, 2004.
- 통일교육원, 『통일문제이해』, 2004.
- Dinan, Desmond, *Ever closer union : an introduction to European integration*, Macmillan, 1999.
- Dinan, Desmond, *Encyclopedia of the European Union*, Macmillan, 2000.
- Judge, David, *The European Parliament*, Palgrave, 2003.
- Nugent, Neill, *The European Commission*, Palgrave, 2001.
- Nugent, Neill, *The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e European Union*, Macmillan, 2003.
- Pinder, John, *The European Un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Powell, Jillian, *The European Union*, Watts, 2001.
- Tames, Richard, *The European Union: A young citizen's guide - series*, Hodder Wayland, 2002.

참고 웹 사이트

- 유럽연합 공식 웹사이트 <http://europa.eu.int/>
- 유럽안보협력기구 공식 웹사이트 <http://www.osce.org/>
- 동아시아국가연합 공식 웹사이트 <http://www.aseansec.org/>

